# 강기정 시장, '생애 첫 투표' 고등학생 독려 "투표가 힘"

## 금파공고 학생들에게 '투표권 투쟁 역사' 등 의미·가치 공유

## "광주 투표율 92.5%… 불가능한 꿈을 모두가 함께 가능하게"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5일 금파공업고등학교에서 '생애 첫 투표'에 나서는 18세 학생들과 참정권의 의미를 나눴다.

이 자리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새내기 유권자로 첫발을 내딛는 고등학생들에게 투표의 역사와 가치를 공유하는 등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애 첫 투표에 나서는 광주지역 18세 청소년은 6457명이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직접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소통하며, 민주주의의 가치와 유권자의 역할에 대해 메시지를 전달했다.

강 시장은 "오늘날 우리가 가진 한 표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로 얻어진 결과이고, 대한민국은 박종철과 이한열의 죽음으로 87년에서야 직선제가 도입됐다"며 6월 민주항쟁, 여성 참정권 운동, 흑인 민권운동 등 투표권 투쟁의 역사를 소개했다.

강 시장은 "투표권은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비교적 최근에서야 주어졌다"며 "생애 첫 투표의 권리를 반드시 행사하고, 투표권이 없는 18세 미만인 학생들은 가족·이웃에게 투표에 꼭 참여해달라고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시장은 "광주 투표율 92.5%라는 불가능한 꿈을 내걸고 광주시와 교육청, 5개 자치구가 열심히 뛰고 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뻔히 보이는 불가능의 길을 걸어간다. 큰 꿈을 꿀수록 깨어진 조각도 큰 법이다"며 목표 달성을 다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6월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민이 더 많이, 더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동불편 시민을 위한 거소투표소 확대 ▲청년층 투표참여 유도 ▲노동자의 실질적 투표권 보장 ▲투표자 대상생활 밀착형 혜택 제공 ▲'잠깐 멈춤, 생애 첫 투표' 응원 캠페인 ▲편리한 투표소 접근성 확보 등 6대 투표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오권철 기자

"국힘 선대위 5·18학살책임 정호용 영입시도, 경악·유감"

# 5·18단체 "피해자와 민주주의 정면도전"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5·18 당시 광주시민 학살에 앞장선 계엄군의 지휘관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을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에 영입하려 했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측을 규탄했다.

5·18 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15일 성명에서 "학살 책임자 정 전 특전사령관을 영입하려 한 김 후보 선대위에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김 후보 선대위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지휘 책임자인 정 전 특전사령관을 상임고문으로 임명했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서둘러 철회한 것은 실로 경악스러운 일"이고 밝혔다.

또 "정 전 특전사령관은 광주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한 5·18 책임자 중 한 사람"이라면서 "이러한 자를 고위 자문직에 임명하려 한 시도는 5·18의 역사와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모욕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록 임명이 취소됐다 하더라도 이러한 시도 자체가 김 후보 선대위의 역사 인식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적 분노 앞에 임명을 철회한 것이지 결코 진정한 반성과 사과에서 비롯된 결정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김 후보는 이번 영입 시도에 직접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며 "향후 5·18을 부정하거나 왜곡한 인물이 정치권에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정 전 특전사령관은 1980년 5월18일부터 27일까지 이어진 5·18민주화운동 과정 도중 계엄군을 지휘, 광주시민을 학살하게한 총 책임자다.

특히 1980년 5월27일 계엄군의 광주재진입작전(상무충정작전)을 지휘하면서 시민군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997년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처벌 받았다.

국가차원 진상규명에 나섰던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 조사 결과 5월27일 당시 숨진 광주시민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지난해 6월 같은 혐의로 또다시 고발되기도 했다.

조사위는 내란목적살인죄는 피해자별로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추가 고발과 기소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민규 기자

# "우리는 위탁생산업체"… GGM 실천협, 노조 상경투쟁에 '일자리 위협' 우려

## 그룹장·파트장 중심 '상생의 일터 실천협의회' 목소리

## "대다수 사원들 상경투쟁 동조하지 않는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조가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와 노동 3권 보장을 촉구하며 현대자동차 본사 등에서 상경투쟁을 벌인 가운데 공장내 '상생의 일터 실천협의회(이하 실천협)' 위원들이 노조의 상경투쟁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15일 GGM에 따르면 생산 라인의 그룹장 및 파트장 50여명으로 구성된 실천협 위원들은 지난 14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노조의 상경집회에 대한 우려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했다.

실천협은 '우리가 할 일은 생산에 전념해 고객사의 신뢰를 쌓는 것이다' 는 제목의 유인물을 통해 " GGM은 고객사로부터 생산물량을 수주받아 운영하는 위탁생산회사다"면서 "상경투쟁 방식이 자칫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사원이 바라는 2교대 체제와 추가 차종을 도입할 수 있는 지름길은 대기중인 주문물량을 계획대로 생산해 우리에게 위탁을 준 고객사로부터 신뢰를 쌓는 것이다"면서 "상경투쟁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사원들은 동조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천협은 "우리의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 회사출범의 근간인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라는 대전제하에 실효성있는 방법으로 해결할때 우리의 뜻이 더욱 멀리, 깊이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면서 "우리는 GGM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모든 구성원이 하나된 힘으로 회사를 지켜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GGM의 총 직원은 680여명. 이 가운데 노조원은 220여명으로, 3분2 이상의 직원들이 노조의 상경투쟁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이하 GGM 노조)는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중당당사와 현대차 본사를 잇따라 방문해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GGM에 따르면 생산 라인의 그룹장 및 파트장 50여명으로 구성된 실천협 위원들은 지난 14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노조의 상경집회에 대한 우려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했다. 사진=GGM제공

GGM노조는 당시 "민주당이 만든 상생형 일자리 1호 기업에서 노동기본권이 제약받고 있다"면서 "단체교섭이 아닌 상생협의회에서 임금과 근로조건을 정하거나, 노조의 단체행동을 제약하는 것은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GGM 노사는 지난 7일 열린 제25차 본교섭에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급기야 노조는 상경투쟁에 나서 노사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뉴시스

# AG 금메달리스트 출신 LH 직원, 뇌물 요구 '징역형 집유'

민간임대주택 부지 내 보상 수용 대상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아시안게임(AG) 메달리스트 출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전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5일 204호 법정에서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LH공사 전 직원 A(44)씨에게 징역 5개월의 집행유예 2년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A씨는 2023년 2월 LH공사가 전북 익산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지 내 수용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골프연습장 사업자에게 강제집행 지연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4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LH공사 전북본부에서 수용 관련 보상 업무 담당자로 일하며 골프장 사업자와의 수용 방식과 보상금 등 문제로 빚어진 분쟁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다.

검사는 A씨가 도박빚 독촉에 시달리다 골프장 사업자에게 뇌물을 요구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LH 소속 레슬링 실업팀에서 활동하며 국가대표로 아시안게임에서 2차례 금메달과 은메달을 땄으며 은퇴 후 LH공사에 취업한 뒤 이번 뇌물 비위에 휘말려 해임 처리됐다. A씨는 자신의 해임 징계가 부당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A씨 측은 거듭 돈을 빌릴 수 있는지 문의한 것이라며 무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장은 A씨와 사업자 사이의 통화 녹취 내용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A씨가 보상 업무를 맡고 있었고 사업자는 LH공사와 수용 문제로 분쟁 중이었다. A씨는 법률 분쟁 사실을 알고 있었고 비록 금전 요구 2주 전에 업무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이를 알 수는 없었다. 단순히 돈을 빌리는 문의전화였다 해도, 이자 등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었다. 직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A씨가 민원인에게 금전을 요구한 행위의 불법성이 인정돼 유죄다. A씨의 행위 자체로 공직의 청렴성과 토지 수용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요구한 액수가 적고 실제 뇌물을 받지는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파면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 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